

社 說

총장선출 논의 활성화돼야

총장은 한 대학의 대표, 즉 학내 모든 업무의 총괄적인 책임자이다. 따라서 총장을 선출하는 방법이나 이에 따른 구성원들의 참여정도는 그 대학의 민주화 정도나 자율화의 척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총장선출을 위한 모든 과정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하며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논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올해 12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총장의 선출을 위한 활동이 학내 민주단체의 결집체인 경희학원민주단체협의회(이하 경민협)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구체적 내용은 미결정상태이지만 경민협산하기구인 민주총장선출특별위원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학내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직선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민협을 제외한 교수협의회의나 학교당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이다.

총장선출을 두달여를 남겨 놓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부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를 각 단계별로 정리하여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다.

상황을 보아가며 개인적인 의견이나 적당히 내놓는 방식이 아닌 구체적이고도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다. 그레야만 각 단계별로 의견을 조정하고 민주적인 총장선출을 위한 논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경희학원의 민주화정도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이번 총장선출과 관련해 각 단체와 구성원들은 이전과는 다른 한층 더 성숙되고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총장선출과 관련된 각 단체가 주지해야 할 바는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를 도출하는데 모든 협상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행자 우선한 인도 확보되길

요즘에 와서는 건설부문이나 소비재 뿐 아니라 물이나 공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중심 사상은 가장 기본이 된다. 하지만 현재 수원캠퍼스 교내의 '길'은 인간 중심도 자동차 중심도 아닌 상황이다.

교내 구간면적교통량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와 비례해 교내 보행자들의 보행권은 그만큼 위협받고 있다. 보행권 위협은 도로 건설의 원칙 부재에서 기인한다. 사장화된 도서관 정면의 버스승차장에서 정면으로 향하는 대형버스 행렬이 교내 교통량을 증가시켰고, 보행자를 위한 인도의 건설은 연세성 없이 군데군데 끊겨있다. 확장되는 도로에서조차 인도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고, 여기에 '어쩔수 없다'는 각종 불법(?) 주차와 주차공간에 세워진 차량까지 보행자를 방해한다. 횡단보도가 있어야 할 곳에도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교내도로는 보행자 우선 도로지만 이런 표지는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고 또 운전자중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 학생회관 앞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당연히 사람이 다녀야 할 길은 운동장이나 있을직한 축구장으로 변했다. 사람이 다녀야 할 길이 뒤통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도로양편으로 주차된 차량 사이를 차량과 보행자가 곡예하듯 스쳐 지나가는 모습은 이미 익숙해져 버렸다. 인도도 통행하기를 고집하는 고지식한 사람조차도 교내에서는 자동차와 함께 섞여서 그 안전을 전혀 보장 받을 수 없다. 이미 설치된 인도는 보행자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번거롭기 짝이 없는 인도는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고, 이제와서는 자동차의 흐름을 막지 않고서는 안전한 인도 확보는 요원해졌다.

이미 건설된 인도의 구조로는 자동차가 교내 규정에 따라 안전운전을 한다해도 걸어나가는 사람과 필연적으로 여러차례 엇갈릴 수밖에 없다. 사람과 차가 도로 중앙선에서 밀고 밀리는 한판 승부를 벌이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고, 잘못된 건설의 댓가를 우리 모두가 몸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사람보다 차량이 차량보다 건설이 우선시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허울뿐인 '신노사관계구상'

—현 정부의 노사개혁 의지를 분석한다

시론

김 철 호

<전국노련 연대사업부장>

지난 4월 24일 대통령 김영삼의 '신노사관계 구상' 발표와 민주노총의 노사개혁위원회(아래 노개위)의 참여 결정을 계기로 5월 이후 지금까지 정부와 자본, 노동진영을 대표하는 각 세력간의 관계뿐 아니라, 민주노총의 내부에까지 적지 않은 갈등과 파장을 형성하였다. 특히 민주노총진영은 상반기 투쟁과 하반기 투쟁문제를 놓고(특히 노개위 철수 등) 적지 않은 갈등과 반목을 조정하여 왔다. 그리고 민주노총 지도부와 산하 연맹, 지역단위들이 속속 노동법개정투쟁분부를 결성하고 총력투쟁을 결의하는 가운데서도 노동법개정을 둘러싼 주체적인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5월 이후 '노사개혁'의 핵심적인 쟁점인 노동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숨가쁜 밀고당김이 노개위를 통해 진행되어 왔다.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로 대표되는 정부의 신노사관계구상은 '공동선의의 극대화, 참여와 협력, 노사자율과 책임, 교육중시와 인간존중, 제도와 의식의 세계화' 등의 5개원칙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었으나, 이미 자체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실천의지없는 말잔치

정부의 '노사개혁'의 실천의지가 말잔치에 불과함이 최근 노개위에 '공익'으로 대표되는 관변지식인

노동자·민중 연대투쟁 지속해야
'노개위' 공익대표 한계 드러나

들의 안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오히려 노동법개약을 위한 요식행위임이 막판까지 오는 협상과 절충과정을 통해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9월19일 그나마 합의된 사항인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삭제'의 경우 현행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의 문제와 함께 해결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전혀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전사업장 확대적용도 89년 노동법 개정될 당시 확정된 것이었으며, 그동안 시행령(4인이하 영세사업장은 제외)의 위법적 내용을 시정된 것이었으며, 이미 올 상반기에 4인이하 영세사업장노동자들의 투

쟁을 통해 대강의 내용이 확보된 것이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쿠데타의 과정 속에서 탈법적인 수단(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 10월 유신,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린되어 왔다. 헌법으로도 보장된 노동3권 중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제한하는 복수노조금지, 공무원과 교사 등의 단결금지, 정치활동 금지, 3자개입금지, 기업별노조 강제 조항 등도 대표적으로 이때 신설, 개악된 것이었다. 현재는 군사쿠데타와 광우학살, 부정축재를 자행한 전두환, 노

태우가 사형선고 등의 중형에 처해 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시 저질렀던 탈법적이고 반역사적인 노동법 개악문제를 해결하려는 원상회복조치는 커녕, 더욱더 자본가들을 살찌우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근로자파견제,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 등의 도입을 정부가 발벗고 나서고 있다.

또한 최근 '경제위기'를 다시 들먹거리면서 위기의 주범이 고비용(특히 고임금)이라고 개별과 보수개입을 노동자에게 '자기기반의 사회적 합의'를 포장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입맛추고 있다. '임금총액규도 동결', '명예퇴직제'등의 바람은 현재 단순한 현업 노동자에 국한되지 않고 취업을 앞둔 대학생

들과 실업계 고교연수생들의 취업문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미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법, 변형근로시간제가 제도적으로 도입되기 전에도 남산물산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되고 있으며, 두산기계가 직장폐쇄 속에서 노노갈등을 조장하며 파견노동자(용역)들을 동원하여 공장가동이 되고 있으며, 수많은 노동자들이 변칙적인 변형근로로 고통받고 있다.

온갖 미사여구로 치장된 현정권의 노사개혁 신구상은 과거정산-원상회복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노개위에 나오는 공익을 자처한 군상들의 대부분은 이미 풀벌레부당의 자기논리조차 상실하여 자본가들과 현 정권이 지시한 작전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수형원이 되어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는 한총련을 친북 반국가단체로 낙인찍어 초유의 구속사태를 남발하고 지역차원까지 공안합수부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최근 어딘가 접점한 '무장간첩사건'을 핑계로 안기부 수사권확대를 노골화하며 언론을 동원한 파시스트책동으로 공안정국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노동법개약과 공안탄압

노동법개정의 성과는 오로지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 속에서 가능했다. 87년이 그랬고, 89년이 그랬으며, 지금도 역시 그러하다. 이제 강요된 평화를 요구받는 오일동주의 시기는 명백히 끝이 났다. 노동법개약과 공안탄압은 자본가와 정권이 단합해 저지르는 만행이다. 민주노총은 이제 다시 생생한 노동자-민중의 목소리와 몸짓이 살아있는 땅으로 나와야 한다. 현재의 상황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미 선제공격은 총자본 진영의 노동자-민중에 대한 각 개격과를 통해 자행되고 있으며 노개위는 노동자에게 '자기기반의 사회적 합의'를 포장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노동법개정과 공안탄압분쇄는 하나된 노동자-민중의 하나된 합성과 강고한 연대투쟁 속에서 만들어 가야 한다.

PC통신원 보수집권층에 반가운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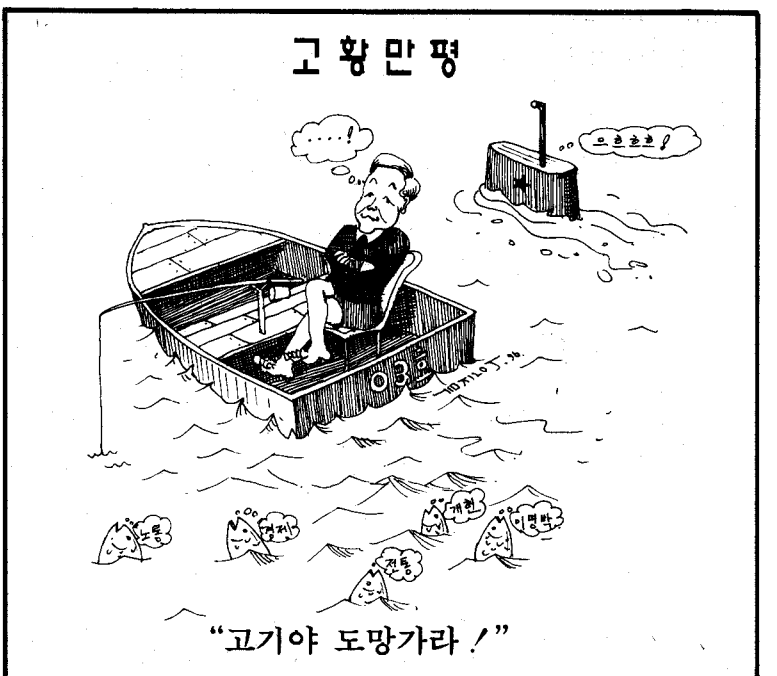
공안정국 강화될듯... 안기부법 개악 가능성 커

이번 북한 잠수함 남침사건은 온 국민으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국가 안보문제, 남침의 목적, 심지어 국내정치와 연관이 있다고 하기도 한다. 북한 잠수함 좌초가 보도되면서 부터 하이텔 PC통신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교환이 무척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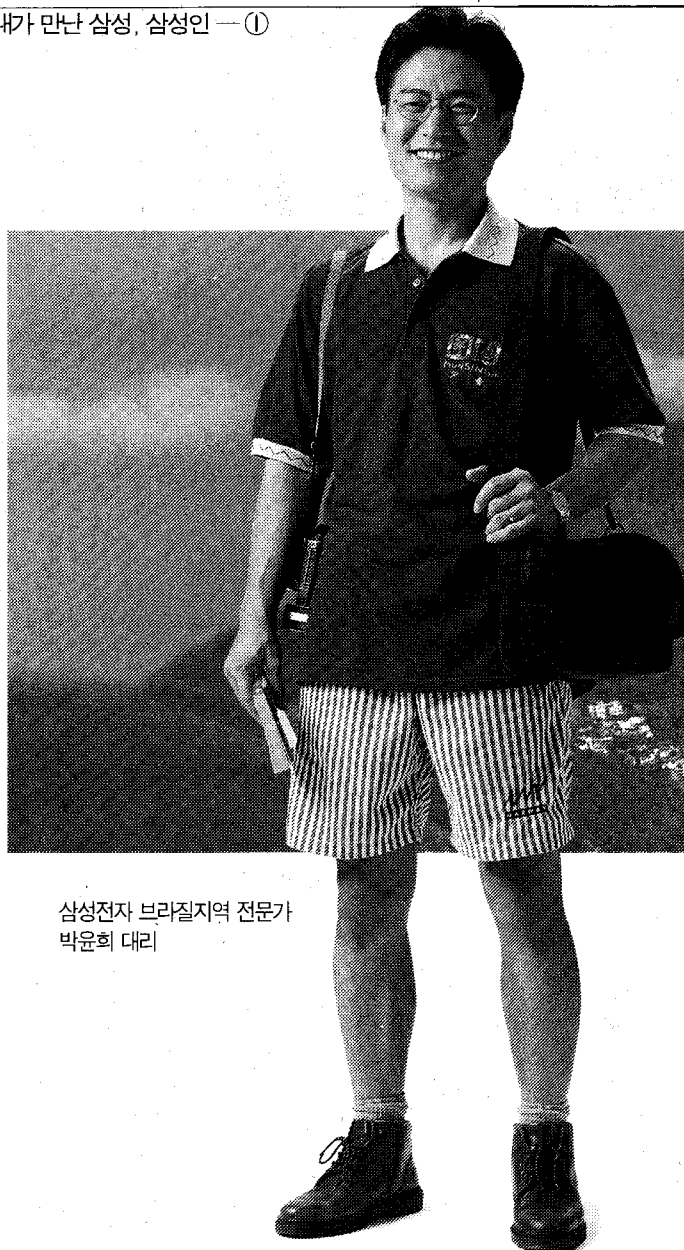
넘어온 무장공비들을 사살하느냐, 생포하느냐에 대해선 심명규씨(ID.-4265shim)는 '변변한 무기도 갖추지 않았다고 보도되고 또 지금은 무장공비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 조국의 핏줄이다.'라며 공비들을 생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창희씨(ID.-ROOKIE96)는 '이미 국군복과 상당량의 무기가 발견된 이상 우리나라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무장공비사건을 다루는 TV뉴스에 대해서는 박성제씨(ID.-CBR400RR)는 '온통 뉴스가 무장공비 이야기라 다른 사건은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것 같다.'며 이번 사건 이후 혹시나 다른 사건들이 보도되지 않은 채 흘러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려했다. 이번 사건이 국내에 미칠 파급에 대해선 김명진씨(ID.-blused)는 '이걸로 안기부법 회생은 당연하게 됐다.'며 공비들이 내려온 시기가 너무 적절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공비 11명이 자살한 것과 비상식량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추격당하는 공비들은 안기부에서 말하는 '남한 전복을 위한 특수조'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무장공비로 인해 국민이 일치단결해야 한다는 정치인들의 말에 많은 이용자들은 '대중의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하는 의문을 달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무장공비 남침에 대해 국내상황이 보수집권층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것에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이 많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될지 의문을 남긴다. (김동욱 기자)



내가 만난 삼성, 삼성인 —①



삼성전자 브라질지역 전문가 박윤희 대리

“남미를 손에 쥔 서른살”



브라질에서의 1년을 생각할때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 아름다운 리오 데 자네이로항, 삼바축제의 열기, 끝없이 펼쳐지던 아마존의 밀림 - 그리고 또하나 잊혀지지 않는 서른살배기 얼굴이 있다. 삼성의 지역전문가로서 파견되어 있던 삼성전자 박윤희씨 - 복잡한 업무 때문에 왔으리라고 짐작했던 내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브라질의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 것이 1년간 그가 해야 할 일의 전부라고, 그리고 그 이유는 21세기 최고의 남미 지역 전문가가 되는 것이라고

회사원이 된다는 것은 틀니바꿔처럼 주어진 일을 반복하는 것일거라고 믿고 있던 내게, 그의 대답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사람을 전문가로 키울 줄 아는 회사, 그리고 패기와 정열로 그 꿈을 실현시켜가는 사람들 - 이것이 브라질에서 만난 삼성, 삼성인의 모습이었다.

한국 외국어대학 포르투갈어과 3학년 김혜영

SAMSUNG

삼성

삼성엔 업무를 떠나 자유롭게 언어와 문화 관습 등 현지 경험을 쌓아 해당지역의 전문가가 되게 하는 지역전문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